

자유칼럼

중국의 의도를 잘 알고 대처하자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침략과 협력을 거듭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문제는 20세기 중반 공산국가로 등장한 중공의 한반도 점령 의도가 불변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와 서울을 점령했고, 중국에는 한반도 분단을 가져오게 했던 사실이다.

그리고 21세기 초부터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역사편입작업을 강행해 우리의 역사를 송두리째 중국사로 둔갑시켜버리는 인류 역사상 전무한 역사전쟁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노골화되어 이제는 한반도공정으로 바뀌어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중국 세력판도에 흡수시키려고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우리와 가까이 지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국부가 증대되어 미국을 상대로 패권을 겨루면서 한·미동맹의 한축인 한국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공산국가이다. 아무리 글로벌세상이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이념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각종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 중국에서 모든 인간생활의 기준은 당의 노선에 따르는 것일 뿐, 법치나 일관된 잣대가 없다.

우리는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중 간에는 추구하는 가

치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거래는 중국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이 배려하는 거래일 뿐 시장경제에 의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따라서 여차하면 한·중 간의 모든 거래는 수포가 될 수 있다.

최근 사드와 북핵 문제로 불편해진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보복조치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한중 우의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자기의 세력권 안에 들어올 것을 강요한다. 이미 북한은 중국 수중에 있으므로 한국만 잘 구슬

리면 될 것으로 알고 협박과 회유 등 각종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각종 제약을 가하려 들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 역시 방치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실기하지 말고 즉시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야 한다. 특히 지난 60여 년간 우리 안보를 지켜준 한미동맹 체제를 대 중국 경제협력과는 무관하게 강화해나감으로써 안보면에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 한·일 관계도 한·미관계 못지않게 돈독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희상 | 자유통일연구원장



통일광장 ②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부터 서둘러야

핵무기·대량살상무기 신속한 통제 중요
민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반드시 필요

통일준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도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정치적 경험이나 리더십도 부족한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 위기를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해 언제든 급변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끝내 붕괴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다양한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자발적인 대중봉기보다는, 우발적이거나 조직적인 군부쿠데타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또한 중국이 북·중무역을 전면 통제하거나, 송유관을 차단하는 등 대북제재를 본격화 하면 김정은 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적 조치로 체제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고, 김정은의 건강이상이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6가지의 상황별 시나리오를 담은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해 두고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 상황, 쿠데타나 주민봉기에 의한 내란,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반출,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재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을 대비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 위의 6가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위의 6가지 상황에 대해서라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중요하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정치적 혼란이 내란·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급변사태 시 군대나 경찰 등의 무장해제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군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해체는 한국 군대로 통합하든 빠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변사태가 안정된 이후 대량난민 사태에 따른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나 국제적인 인도지원기구들의 긴급구호 지원, 난민수용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한 통일준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급작스런 변화 사태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일이다. 사진은 중국에 바라본 북한 국경지역.

또한 북한에 내전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적 보복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량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난민캠프 조성 및 식량, 의료, 행정 인력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급변사태 시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전 국가적 차원, 전 국민적 참여가 보장돼야 제대로 대비가 가능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국제사회-정부-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김윤태 | 통일전략연구소장, 통일학 박사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7년 2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